

연구 노트

창업을 희망하는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지원방안

황정임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류연규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류만희 | 상지대학교 교수

혁명적 가족관계를 위한 가족정책과제

장혜경 |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정책센터 소장

블루오션 '여성기업'의 금융지원 방안

임희정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리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가?

정진주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는 한국 여성

김남희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창업을 희망하는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지원방안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한 자활지원방안 연구

황 정 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류 연 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류 만 희 상지대학교 교수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소득보장정책 중심의 빈곤정책과는 다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근로가능자의 빈곤탈피, 자활지원을 위한 근로연계형 복지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자영창업지원정책은 바로 이런 근로빈곤층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빈곤정책 중 하나로, 다른 국가들 사례에 따르면 창업지원정책의 주 정책대상이 빈곤여성이고, 이들의 탈빈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여성화'와 함께 근로빈곤여성의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해 이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창업준비가 미흡한 빈곤여성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영창업한 빈곤여성의 실태 및 자영창업의 자활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창업을 희망하는 빈곤여성들은 대부분 실질적인 생계부양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취업을 통한 소득으로는 자녀양육이나 생계유지 등이 어렵기 때문에 창업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창업을 희망하는 남성들에 비해 인적자본이 취약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남성들과 달리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창업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창업을 위한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창업을 시도하고 있었다. 창업준비 기간도 길지 않았고, 창업준비활동의 대부분을 창업자금 신청에 할애하고 있어서 창업상담기관 방문 및 창업상담, 창업준비교육 등 창업을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는 미흡했다.

문턱 높은 담보와 보증, 미흡한 사후 관리

창업자금은 빈곤여성들에게 창업의 기반을 만들고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보증인이나 사업장 임대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정보를 문의해도 해당기관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빈곤여성들은 창업자금 기관 지원에 대해 좋지 않은 경험들을 갖고 있기도 했다. 또한 창업자금 이후 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는 자영창업의 생존율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지원서비스인데, 창업자금기관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기관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관도 있었다. 그 결과 다수의 자영창업한 빈곤여성들도 사후관리를 자금지원에 따른 형식적인 관리로 인식하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자신에게 도움될만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

청하고 활용하기 보다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제공받는 수동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자립계획을 갖게 하는 긍정적 효과 낳아

결국 빈곤여성들은 창업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창업준비나 창업 후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 운영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자녀양육 및 가사일과의 병행으로 인한 물리적인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자영창업한 업종의 다수가 이·미용업이나 음식점점 등과 같이 이미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고 업종 특성상 소득창출의 한계가 있는 업종에 집중되면서, 현재까지 기대만큼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여성들은 창업한 이후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의욕 등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갖게 되는 등 비경제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보다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창업지원정책 필요

본 연구 결과, 빈곤여성들이 자영창업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와 비경제적인 효과 모두를 높일 수 있도록 빈곤여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성공을 위한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빈곤여성들은 창업과 관련하여 자원이나 정보, 생활여건 등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위한 사전준비에서부터 창업 이후의 유지를 위한 경영지원, 일상생활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까지 등 단계별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빈곤여성 친화적인 지원인프라를 통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빈곤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자영업자들과 다른 빈곤한 여성들이 갖는 자영창업의 제약을 고려하여 보다 밀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창업지원 인프라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간의 연계를 통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지지망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실태와 자영창업의 자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대상자 확보 과정이 쉽지 않았다.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했을 때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민감성, 체계적인 정책수혜자 정보 관리의 미흡 등의 이유도 있었지만, 과거 본원의 연구에 협조했으나 그 경험 이 좋지 않았으며 거절한 곳도 있었다. 다행히 본 연구의 취지에 공감한 몇몇 창업지원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실제 창업지원한 기관에 방문해서 설문지 배포 및 수거, 설문조사 참여 독려 및 확인전화 등)가 있었기에 본 연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 연구내용에 따라 관련 기관의 협조가 절실할 때가 있다. 이때 해당연구에 대한 협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할 때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협력적 관계로 남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 같다.

● 이 글은 2006년 본원 평등정책연구실에서 수행한 연구를 소개하였습니다.

혁명적 가족관계를 위한 가족정책과제

정보화로 인한 가족기능변화와 미래가족 전망

장 혜 경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정책센터 소장

IT 혁명은 ‘우리는 지식정보화의 공기로 숨을 쉰다’라는 표현으로 일축될 수 있을 만큼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 IT로 인한 재형성의 과정을 겪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현 시점에서,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 또한 새로운 의미 규정의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원의 장혜경·김혜영·김영란은 정보화사회의 메가트렌드에 의한 가족변화양상을 통해 미래의 가족을 전망하며 가족정책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정보화사회의 가족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인터넷과 디지털 문화를 향유하는 디지털 신인류로 불리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트렌드는 디지털화 시기에 태어나 성장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or generation)’과 아날로그 시대에 자랐지만 디지털화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로 구분해 내었다. 디지털 세대의 특징적인 정의는 온라인 속에서 자라고,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은 세계를 생각할 수 없는 세대이다. 인터넷은 그들의 기대 및 행동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모습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족 내에서 혁명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가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가족의 변화는 전체로서의 가족과 가족 내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 새로운 가족문화를 등장시키고 가족기능의 변화를 수반한다. 특별히 한국사회는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를 경험하면서 가족모습과 생활의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가족형태의 다양성과 함께 더욱 확대되는 다양한 가치관 표출, IT의 발전으로 유비쿼터스 사회의 진전과 전 지구적 소통의 생활화 측면들은 가족에 대한 개념 및 가족관계 등에서 지금까지의 가족역할이라고 간주되어 온 측면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엘빈 토플러는 미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심층기반들 중 가족을 시간이라는 속도에서 시속 60마일 자동차로 비유하였다. 가족은 시속 100마일의 기업처럼 과속으로 달리지는 않으나 교육의 10마일이나 법의 1마일 속도처럼 지체나 정체가 되지 않고 달리고 있으며 그 속도는 디지털 혁명으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며 가족유형, 이혼율, 성행위, 세대 간 관계, 데이트패턴, 자녀양육 등 가족생활의 모습들을 모두 급속도로 달라지게 하고 있다.

고도정보화 사회에서 가족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중심축에 의해 그 변화의 방향이 추동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족기능의 복잡화·다양화이다. 다른 하나는 다양하게 등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기제들과의 관계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하거나 팀플레이로 가족안팎의 경계이완이라는 타협점을 통한 가족의 기능적 효율성과 만족도의 극대화이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한 네트워크의 확장이 현대가족에게 던져주는 변화의 의미와 향방은 매우 다층적이고 다중적임을 나타낸다. 일례로 그러한 기술발달을 이용하여 가족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킴으로써 가족유대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족 내 개별화를 더욱 촉진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개인의 의존성과 통합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생활에서의 정보화 및 자동화 추세는 가정과 직장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로 인해 개인은 더욱 많은 여가시간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네트워크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유대관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의 양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이같은 양가적 현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는 특정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개인 및 가족의 역량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변화하는 가족관계를 위한 정책과제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양상들이 미래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또 예기치 못한 다른 문제 또는 기회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기리기 가족의 등장,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 출산율 감소, 입양문화의 확산 등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가치와 행태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들이 결혼 연령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가족에 대한 애정중시나 혹은 애정결핍의 악순환이 동시에 공존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단함과 동시에, 문제보다는 기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은 더욱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미미할 수 있지만 차후 사회를 관통하는 커다란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적 쟁점들, 특히 정보기술을 활용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뿐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가족개념의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활 로봇의 상용화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로봇의 의미, 그리고 동물의 의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기술들의 개발에 따른 가족으로서의 애완동물의 위치 등은 인간 이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혁명적 가족관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전망들 속에서 분명한 것은 가족 변화의 모습은 계속 겪을 수밖에 없으며, 새로워지는 가족모습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과 사회변화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가족정책적 노력과 정책적 시각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가족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 및 법·규범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가족관련 현행법의 검토와, 다양하게 대두되는 가족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서 U-Home, U-Work, U-Childcare 등의 확산에 따른 사회, 문화, 법, 제도적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족의 제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엮음으로써 가족이 새로운 사회적 위협의 발생지가

되지 않도록 가족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기존의 실업, 질병 등과 달리 임신, 출산, 양육, 부양 등의 돌봄문제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해결하기 어려운 데서 나타난다). 가족과 관련한 사회적 유대로서 모계 중심적 유대가 강해지고 있다. 맞벌이 모델로의 전환 추세는 가족과 기업, 지역사회 등 사회 환경 전체가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구조로 재편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양성평등한 역할분담과 가족관계 정립을 통한 가족의 안정 도모,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향유, 아동 및 노인 등이 안전한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 및 지역사회 조성 등의 정책적 노력은 기존의 가부장적인 유대에 근거한 우리 사회와 제도의 질서에 많은 갈등과 이해의 상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그러한 사회적 전환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디지털 세상(Digital Inclusion)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가족이 디지털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재화를 통한 디지털 복지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면에서 e-learning은 장소에 구애되지 않아 자녀교육 과정에 부모의 참여비중을 높이게 되고, 교육비의 절감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사교육비 절감 및 평생교육의 수단으로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가족의 소득증대, 교육기회,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기회 촉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실생활에서의 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과 대상별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2006년 본원 가족정책센터에서 수행한 연구를 소개하였습니다.

블루오션 ‘여성기업’의 금융지원 방안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차별관행 개선방안 및 해외 선진사례연구

임 희 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최근 세계적 동향을 보면 여성기업의 수는 기업 전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성장률과 고용 창출력에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OECD, 2000; 정희선, 2002). 고용창출과 혁신의 동력으로서 여성중소기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사업체는 114만7천개로 전체 사업체의 36.0%이며, 여성기업의 여성고용률은 74.4%로 남성기업의 여성고용률 32.5%에 비해 2배나 높은 편이다(통계청, 「2004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여성인력 고용비율이 높은 여성기업의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는 효과가 높아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여성기업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경영자원 중 자금조달, 판로개척, 네트워크 형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금융기관의 지원 수준은 아직도 여성기업의 육성에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기업인은 경영활동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을 들고 있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중의 하나가 금융부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금조달의 어려움

자금조달 문제는 모든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여성기업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을 보면 ‘자기자본 조달’이 76.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16.7%, ‘개인 사채 및 기타’가 5.6%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자금’은 0.6%에 불과하였고 ‘창투자 및 벤처캐피탈 자금’과 ‘회사채 및 주식 발행’은 또한 0.1%로 극히 저조하였다.

여성기업인으로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애로사항으로 ‘여자라서 신용도를 낮게 평가함’이 4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출한도 부족’ 17.5%, ‘담보부족’ 15.9%, ‘신용보증기준의 엄격함’ 11.4%, ‘로비나 접대문제’ 6.9% 순으로 조사되었다. 금융기관 이용시 어려운 점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단지 여성이라서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는 비율이 44.3%에 달하는 것은 아직도 금융기관의 문턱이 여성기업에 대해 더 높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통해 여성기업인

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의 마련 등 일부 제도적 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여성기업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수정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을 시정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금융기관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건전한 여성기업의 경우 경영성과에 있어서 남성기업과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여신 건전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유망한 금융고객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은행은 여성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높이고 여성기업이 은행권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남성이 아닌 여성 금융상담자를 두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각종 정부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은 여성기업의 지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창업자금과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여성기업 지원 수혜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및 보증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목표치 3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자금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중장기적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상 집단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특히 소요자금 규모가 증가하는 성장기 단계의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기업 영위업종에 대한 사업성 평가 모델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여성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융자 및 보증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해 전통적 신용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여성기업가와 업종에 기반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여성 업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청과 여성기업 관련 단체는 여성기업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애로사항과 모범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개선 또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불편사항 사례와 모범사례를 수집하여 해당사례집을 발간하고 여성기업 단체와 각 금융기관의 '여성기업책임관' 등에게 배포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여섯째, 여성기업인의 자본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인 단체들과 정부계 금융기관, 일반 은행, 투자가와 융자지원 포럼, 투자대회 등을 개최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와 기관별 융자 프로그램을 교환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벤처 투자마트'를 활성화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미흡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성기업인들이 기업재정의 현재 상황을 파악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성장전략에 따른 미래의 자금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이 글은 2006년 본원 인적자원연구실에서 수행한 연구를 소개하였습니다.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가?

외국의 여성건강증진 기반 고찰 및 한국의 정책과제

정진주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강조,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돌입과 함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는 건강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며, 임신·출산과 관련된 재생산기능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 특성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건강행태가 달라 성 인지적 관점 하에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에 맞는 연구 및 정책이 시행되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여성건강정책 및 사업은 매우 저조하였고 그나마도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여성-특이적이라고 지칭되는 질병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여성건강정책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건강정책의 현주소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강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다양한 나 그 어느 부처에서도 여성건강정책을 위한 책임을 단독으로 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협의체를 형성하고 있지도 않아 장기적인 전략 하에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최근 조직개편 이후 저출산고령정책본부에 인구여성정책팀과 출산지원팀에서 여성건강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팀의 사업 내용은 임신, 출산, 모자보건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보건복지부내 다른 팀에서는 여성건강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여성정책기본계획에도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이를 추진하도록 여성가족부가 타 부처를 추동해내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이행점검 및 평가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즉 정부부처 어떤 곳에서도 여성건강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여 책임지는 곳이 없으니 구체적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인프라도 형성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국민건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Health Plan 2010' 과 '제 2, 3차 암관리기본계획' 등에 막대한 예산투입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이에 걸맞는 사업은 부재하다. 각 계획에 여성과 남성의 목표치는 설정되어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그 목표치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실태와 전략은 없는 형편이다. 국가적 차원의 건강계획형성에 여

성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의 여성건강 및 건강영역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부족으로 전체 사업을 설정, 진행, 실시, 평가하는 데 여성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2003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여 발간한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에서도 외국의 여성건강증진 기반조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후 어떠한 연구나 정책도 시행되지 않았다.

연구의 목적과 범위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건강증진을 위해 일차적으로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① 한국의 여성건강증진 기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② 외국의 여성건강증진 인프라 구축의 과정 및 현황을 고찰하여, ③ 향후 여성건강증진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현재 연구초기단계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연구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첫째, 연구서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여성건강증진이라고 할 때 여성건강증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협소한 의미로서 건강행동변화의 주체인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초점을 두는 대신 건강문제의 원인이나 결정요인에 초점을 두고 여성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활동을 여성건강증진으로 보기로 하였다.

둘째,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인프라는 특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선결과제 또는 기초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의 공중보건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보고서에는 크게 정보, 인력, 조직이라는 3가지 영역으로 보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인프라라는 용어를 공중보건 내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진은 이 문제에 관해 인프라에 포함될 구성요소가 많이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이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을 염두에 두고 인프라의 구성요소를 선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자문가 회의에서 정부부처 담당자와 예산담당 전문가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권유되었다.

셋째,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다양한 부처에서 건강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외국사례를 살펴볼 때 다양한 부처의 건강증진기반을 모두 다 살펴볼 것인가이다. 향후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일차적으로는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내용을 외국사례에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따라서 예를 들어 근로자의 건강은 외국사례를 살펴볼 때 일반공중보건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만 언급하되 주요 초점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건문제가 될 것이다.

넷째, WHO에서 정의하듯이 건강이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라면 본 보고서에서 건강은 어디까지 다루어야 할 것인가? 외국사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각 국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여성건강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건강의 내용과 어떠한 차이점 및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외국의 여성건강정책이 시사하는 정책과제

이렇게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살펴 볼 연구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기존의 문헌검토를 통하여 젠더와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여성과 남성 각각의 젠더와 건강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성별에 따른 건강상 남녀차이의 건강수준(사망률과 상병) 및 보건의료의 사례를 보여주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 성역할, 성차별,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노출과 반응, 사회적 지지의 성차를 보여줄 것이다. 이는 왜 우리가 여성건강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답을 줄 것이다.

둘째, 한국에서 여성건강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인프라의 범위는 ① 여성건강에 대한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통계 및 지표 ② 건강관련 법 및 다양한 국가건강계획에서의 성 인지성 여부 ③ 제도적 장치로서 여성건강책임 기구/부처 및 활동내용, 성 인지예산, 건강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등 ④ 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셋째, 캐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통해 각국에서 여성건강증진 인프라가 왜, 어떻게 구축되었고, 어떤 장애가 있었으며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1995년 베이징 유엔 여성 회의에 “성평등을 위한 연방계획(Federal Plan for Gender Equality)”을 제시하고 성 주류화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체계적인 접근을 공식적으로 명시하면서 여성건강을 연방계획에 포함시켰다. 캐나다 보건부는 1993년 신설된 여성건강국을 중심으로 젠더렌즈로서 모든 정책과 건강불평등을 모니터 하고 있으며, 1999년 “여성건강증진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을 설정하였다. 이 전략은 성별영향평가(GBA)에 근거한 보건부의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 지침서를 개발하고 조직 활동, 조직개발, 정보제공과 같은 다양한 역량구축 방법과 과정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부 내 모든 정책과 실행 프로그램에서는 성별영향평가에 근거한 성인지적 사업을 수행하며,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보건문제 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연방정부는 2000년에는 기존 연구결과의 요구에 맞추어, “캐나다 건강연구연합(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산하에 “젠더와 건강연구소(Institute of Gender and Health)”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건강지표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여성건강 연구자의 지역별 네트워크를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에서 여성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본 연구서가 여성건강증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처음으로 밀도 있게 살펴본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후속연구가 본 연구서에서 담지 못할 내용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길 희망해 본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여성건강을 위한 인프라형성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예산이 배정되어 실질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기반조성의 구체적인 방식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되 우리의 현실에 맞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자본재로서의 건강투자로 인한 고용창출 및 고용의 질 고양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 이 글은 2007년 현재 본원 평등정책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소개하였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는 한국 여성

고학력 여성 해외취업 지원사업 실태와 정책과제

김 남 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요즘 한창 일할 나이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방황하는 대졸 실업자들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 자주 소개되고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우울하지만,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와중에 청년실업을 탈출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해외취업에 대한 이슈가 여기저기서 논의되고 있다.

세계가 한 마당이 되고, 일자리를 찾아 인재를 찾아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빈번한 글로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이미 선진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들도 “인재전쟁(war for talent)”의 심각성을 깨닫고 좀 더 우수인력을 찾아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일부는 쓸모 있는 인력이다 싶으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유혹의 제스처를 던지고 있다. 최근 OECD의 문헌을 보면, 국가간 인구이동, 특히 고급인력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자원의 유입과 유출에 대하여 전통적인 brain drain이나 brain gain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brain circulation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으로 논의의 방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선진국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어떠한가? 이미 국내에 많은 외국인력이 유입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논의와 집행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의 청사진인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6-2010)」에는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가 주요 정책의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국제 경쟁력 있는 인력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고, 많은 정부 부처 및 관련기관, 전문대학, 대학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외진출 사업에 고학력 여성의 참여가 상당히 활발하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여성의 참여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중에서 성공적으로 해외취업에 성공한 이들 중에 여성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연구자가 다른 일로 지방국립대학을 방문하였을 때, 학교 관계자들이 그 학교의 양성평등과 관련한 성과 중 재학생 혹은 졸업생의 해외인턴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돋보이는 성공사례로 여학생들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여성의 능력은 국제무대에서 더욱 돋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외국어

능력이나 국제환경에서의 적응능력 면에서 남성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젊은 여성들의 국제경험에 대한 욕구도 남성에 뒤지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들이 연구자의 직감에 확신을 더해준다.

본 연구에서 능력 있는 국가인력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 옳으나 그르냐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상적으로 국내인력의 해외취업이 최근 활발히 시도되고 있고, 그 안에 많은 능력 있는 고학력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기존의 관련 논의에서 여성은 특별한 관심의 주제가 아니었는데, 본 연구에서 연구진은 여성의 참여가 높은지, 그렇다면 왜 높은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무엇을 경험하는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어떠한 뒷받침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정부관련기관/지방자치단체, (전문)대학에서 실시하는 해외취업 혹은 취업관련 경험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를 연구의 초점으로 삼아, 주로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문헌자료 분석, 관련 통계자료 재분석, 관계자 및 참여자 심층면접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고학력 여성에 특화된 해외취업 정책 및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획득하고, 그들의 해외취업에 제도적, 환경적, 심리적 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성공 및 실패사례에 대한 분석은 향후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참고할 만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2007년 현재 본원 고급여성인력혁신전략센터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소개하였습니다.